정보보호공시 의무, 전체 상장사로 확대

정보보호공시 의무 기업이 확대 됩니다. (10월 27일 공포)
매출 3,000억 원 이상 요건이 사라져 모든 상장사가 대상이 됩니다.
상장사가 아니어도 ISMS 인증 의무 기업이라면 공시 대상입니다.

01

매출·CISO 요건 삭제

SPAC를 뺀 코스피, 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대상입니다.

02

ISMS 인증 의무 기업 편입

상장 여부와 무관하며, 인증 '보유'가 아닌 '의무' 기준입니다.

03

공공·금융 예외 조항 삭제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소기업 제외 규정이 폐지됩니다.

정보보호 종합대책 1년 만에 공포

- 2025.10.22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및 공시 확대 예고
- 2026.0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2.19)
- 2026.0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기준 2026년 공시 의무 대상 693개사 공개
- 2026.05.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입법예고 및 소기업 시행일 2년 유예 추가 (~6.22)
- 2026.10.20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 **2026.10.27 대통령, 대통령령 제36783호로 공포** (2027.1.1 시행)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2027.1.1 시행과 함께 확대 대상의 첫 공시 절차가 시작되고, 소기업은 2029.1.1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조항

ARTICLE	개정 전	개정 후
강화 **제8조 ①항 2호**	CISO 지정·신고 의무자 중 매출 3,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전체 (SPAC 제외)**
개정 **제8조 ①항 3호**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전년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신설 **제8조 ①항 4호**	해당 없음	**망법 제47조제2항 각 호 해당자 (ISMS 인증 의무자)**
강화 **제8조 ②항**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 제외	**조항 삭제**
정비 **제27조의2 2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인용 정비)**
시행 **부칙 제1조**	해당 없음	**2027.1.1 시행**
유예 **부칙 제2조**	해당 없음	**소기업은 2029.1.1부터 적용**

대상 및 제재

상장법인 SCOPE	매출 규모, CISO 신고 의무와 관계없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 전체가 대상입니다. SPAC는 제외됩니다.
ISMS 기업 SCOPE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인증 의무자는 비상장이어도 대상입니다.
공공·금융 SCOPE	공공기관,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도 상장, ISMS 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해야 합니다.
이용자 수 CRITERIA	전년도 1년 전체 일평균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기존 방식상 비대상 기업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소기업 TIMING	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시 요건을 판단합니다. 적용은 2029.1.1부터입니다.
제재 ENFORCEMENT	미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정부는 사후 검증으로 불성실 공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600여 개사
2027년 의무 대상
(2026년 693개사)

2조 4,230억 원
2025년 공시기업
정보보호 투자액

정부와 업계의 시각

GOVERNMENT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INDUSTRY

“공시 서류를 잘 쓴다고 해킹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

실효성 논란

업계는 인력·비용 부담과 공시 정보의 해킹 악용을 우려하고, 검증 수단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취약점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01

- **공시 대상 여부 재판정**

  상장, ISMS 인증 의무, 연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확인

02

- **공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CISO, CPO 현황과 내부·외주 인력 자료 정비

03

- **가이드라인과 검증 동향 확인**

  개정 가이드라인, 지원 일정, 불성실 공시 제재 여부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